

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발족

위촉식 개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사용처 등 선정 기능 수행

전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 소

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며, 이날 발족된 기금운용심의위원

회는 기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사용처 등을 선정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기부자들에게 제공될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답례

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금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전주발전을 위해 출항인 및 관계인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학력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암 예방 교육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스쿨어택' 사업을 실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병원 스쿨어택 사업 '호응'

아동 눈높이 맞춘 찾아가는 암 예방 교육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학력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암 예방 교육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스쿨어택' 사업을 실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지역암센터 주관으로 지난 10월 한 달간 순창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암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순창초등학교와 순창중앙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스쿨어택 현장교육에서는 암의 이해와 국민 암 예방 수칙, 국가암검진사업 및 암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학업완수에 실시한 이번 암 예방 스쿨어택은, 암을 이해하기 어려운 학력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암 예방 수칙

실천을 독려하고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순창군은 도내 지역별 초등학교 수 20개 미만 지역 중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도내 최하위 지역으로 파악, 학력기 아동의 암 예방 교육이 가정으로 전달돼 학부모(조부모)의 국가암검진 수검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소아청소년기는 대부분의 건강습관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올바른 암 예방 생활습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암 예방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학부모의 암 검진 수검률 향상과 지역사회 건강의 질 향상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BRT 도입 ·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방안 논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전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토론회 공동 개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와 전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달 31일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해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키면서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10 이하, 운영비는 1/7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전주시도 BRT 도입의 필요성이 높았으나 법률상 광역교통이 필요한 대도시가 아니어서 국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전주시와 지역정치의 노력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전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달 31일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과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되어 BRT 추진이 현실화되었다. 토론회는 '한국 BRT정책 발전과 전

주시 BRT정책 방향'에 대한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선임연구원의 발제와 '전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현황'에 대한 전주시 버스정책과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 하갑주 생태교통협의회 위원장 진행하에 박선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이강준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 이주열 세종시 버스운영담당관을 비롯하여 정대목 전북교통연구원 소장, 문지현 버스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등 교통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선전 위원장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BRT노선과 지·간선 버스와와의 환승 연결, BRT 버스 체계와 연관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주시에 맞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 목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1월 한달 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계획을 알렸다.

이번 '불조심 강조의 달'은 범도민적 참여를 독려하고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3대 중점 과제로는 △도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도민 참여형 소방안전문화 확산 등을 담고 있다.

분야별 중점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불조심 강조의 달 현수막 및 배너

홍보 △불조심 캠페인 송 및 홍보물품 배부 △홈페이지, 언론보도, SNS, 대형전광판 등 홍보 △대국민 화재예방 집중 안전교육 △제60주년 소방의 날 자체 행사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OPEN-소방서! 안전체험교실'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이 있다.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활용 특강 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음식 무인 주문과 무인 발권 등 비대면·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된 가운데 전주시가 무인 주문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3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에서 음식점 등 무인주문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활용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무인주문기(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교육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본적인 스마트폰 활용법과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법 교육도 제공된다.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일

오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 배움터(www.디지털배움터.kr)를 참고하거나, 전북지역 콜센터(1899-6222) 또는 통합 콜센터(1800-0096)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를 활용해 손쉽게 주문하고 버스표를 구매하는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배움터'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최라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무인주문 음식점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고 전주시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지방세 체납자 휴면예금 압류

성실 납세 풍토 확립 · 공정 과세 집중

전주시가 지방세 체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의 휴면예금을 찾아내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있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가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한 후 확인된 계좌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기로 했다.

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개인별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 재

산'으로 추심금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10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331억 원으로, 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자의 휴면예금 외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라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지만,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여 성실 납세 풍토 확립과 공정과세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